

전남광주특별시, 'AI·에너지·반도체' 특례도시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무엇을 담았나

연 5조·4년 최대 20조원...세울조정·권한이양 명문화 교육·의료·광역교통 자치권 확대...각종 절차 간소화 농수산 분야 권한 강화...맞춤형 농촌개발계획 수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를 축으로 한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 농수산업과의 균형 발전을 토대로 문화·경제·교통·복지 전반에 걸친 특례를 확보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자립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이 같은 비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대거 담겼다. 전남도와 광주시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 직할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규정했다. 청사는 전남 동부청사·무안청사·광주청사를 균형 운영하되, 명칭과 주청사 문제는 7월 1일 출범 이후 재논의하기로 해 향후 쟁점으로 남았다.

통합특별시 아래에는 기존 시·군·구를 그대로 두고 명칭과 관할구역, 자위 및 권한을 유지한다. 다만 초광역 도시계획과 광역교통체계, 광역 인프라 등 일부 사무를 제외한 상당수 권한은 시·군·구로 이양된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의 인착을 위해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

원 계획을 밝혔다. 지원 규모는 기존 수준 이상을 보장하도록 명시됐고, 보조금 지급과 투자·융자 등 특별 재정 지원 근거도 담겼다. 지방세는 해당 세목 세율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취득세 인하 등 세제 전략을 통한 기업 유치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구체적인 재정 이양 방안은 향후 보완 과제로 남았다.

특별법은 중앙 행정기관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재정 분권 확대를 병행하도록 규정해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행정 혁신의 모델이 되도록 설계했다. 교육자치도 강화된다. 교육부 장관에게 있던 상당 권한이 통합교육감과 특별시장에게 이양된다. 사립학교 설치·경영 권한이 교육감에게 주어지고, 자율학교·영재학교·특수목적고·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이 가능해진다.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인재 특별전형, 특성화대학 지정 등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농어촌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3세 미만 유치원 입학 허용, 농어촌 유학 운영, 소규모학교 지원 확대 등도 추진된다.



지난 1일 오후 9시 1분께 국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해부

산업 분야에선 재생에너지와 성장 유망 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이 핵심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을 3MW에서 20MW로 확대했다. 지방공기업과 통합특별시의 직접 투자도 가능해진다. 인공지능 혁신거점·실용지구, 반도체 특화단지, 모빌리티 미래도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조성 근거도 포함됐다. 전략산업 사업비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도 명

문화했다. 농수산 분야 권한도 강화된다. 특별시장이 농촌활력촉진특구를 지정하고, 농식품 부 장관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일부를 해제할 수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농촌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어업허가권 역시 이양돼 어장 개발과 수산자원 관리에 자율성이 확대된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광역도로, BRT, 환승센터, 화물차 차고지 등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지며, 철도·도로 국가계획 우선 반영을 통해 산업단지 및 광역생활권 간 연결성을 높이도록 했다. 3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위임과 건축 통합심의 도입으로 택지개발과 주거단지 조성 절차도 간소화된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제도화됐다. 종합병원 개설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공공의료재단 설립을 통해 분산된 의료 자원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목포대·순천대 통합과 국립의

대 신설 추진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전남 기금 설치 조항도 담겼다. 통합특별시는 산업·교육·의료·교통 전반에서 특례를 확보했지만, 재원 이양의 구체화와 청사·명칭 문제 등은 향후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았다. 출범 이후 실질적 권한 행사와 재정 운용이 성과를 거둘 핵심 변수로 주목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 언급 '강진 반값여행' 프로그램 전국 확산

정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4월부터 두달간 진행 강진·영광·해남·고흥·완도·영암 등 전국 16곳 시행

강진군에서 시작된 이른바 '반값 여행'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반값 여행' 프로그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무회의의 등을 비롯해 세 차례나 언급하며, 관광정책의 방향 전환을 강조한 것이어서 효과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지역사랑 휴가지

원', 이른바 '반값여행'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참여 지방자치단체 16곳을 선정했다. 해당 지자체는 전남(강진군, 영광군, 해남군, 고흥군, 완도군, 영암군), 강원(평창군, 영월군, 횡성군), 충북(제천시), 전북(고창군), 경남(밀양시,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남해군) 등이다. 해당 지역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개인당 최대 10만원이고,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18세 이상 국민은 사전에 여행 계획을 지자체에 신청해 승인받은 뒤 실제 여행 후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경비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된 상품권은 올해 안에 해당 지역의 가맹점이나 특산물 판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해야 한다. 예산 65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 신청 시기와 증명 방식, 사용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지자체별로 달라 사전에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visitkorea.or.kr)과 각 지자체 누리집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하반기에 지자체 4개를 추가로 공모하고, 올해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대상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른바 '반값 여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조해왔던 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강진의 '반값 여행'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처음 언급한 이후 특히 지난달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강진군의 '반값 여행'처럼 여행비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지역 상권에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출신' 박은식 산림청장 취임

산불대비 태세 점검...산림정책 전반 통찰력 가진 전문가

박은식 산림청장(사진)이 취임 첫날부터 전국 산불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등 봄철 산불대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박은식 산림청 차장을 임명하고 박은식 산림청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탁월한 기획력이 있는 산림전문가로 조직관리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 출신인 박 차장은 지난 2001년 기술고시(36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25년간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기획재정담당관, 산림환경보호과장,



산림정책과장, 산림자원과장, 산림산업정책국장, 산림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산림산업정책관으로 재직하며 국민주권 시대를 뒷받침하는 산림분야 국정과제 수립과 산림분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활용도 제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산림협력관으로 재직 시에는 산림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세계산림총회'(WFC)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광주 3·1운동 주역 김범수 선생 107년만 '건국훈장 애족장' 서훈

광주 3·1운동의 핵심 인물인 김범수 선생이 뒤늦은 역사적 재평가 끝에 국가 서훈을 받게 됐다. 2일 유가족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인쇄·배포와 광주 만세운동 준비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해 김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애족장은 건국훈장 5등급에 해당한다. 김 선생은 경성의학전문학교 재학 중이던 1919년, 일본 도쿄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소식을 국내에 연결하며 본격적으로 항일운동에 뛰어들었다. 이후 등사기를 직접 마련해 전남 장성에서 독립선언서를 인쇄했고, 광주 지역 청년 조직과 연계해 단체 시위를 준비하는 등 실행 단계까지 깊숙이 관여했다. 김 선생은 3월 10일 일본 경찰에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임영진 기자



'지역의사제 품수 차단'...같은 지역 중 졸업해야

복지부,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6일 재입법 예고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지역 의사 양성 목적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전남대 의대나 조선대 의대 등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하려면 반드시 광주·전남·전북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정부가 지역의사제 선발을 앞두고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 방지하고, 지역 내 장기근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지역 위대'가 있는 광역권' 기준으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 오는 6일까지 재입법 예고했다. 재입법예고안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의 선발 비율과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규정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최소 10%'라는 하한선은 2027학년도 비서울 의대(총 정원 2722명)에서 지역 의사로 뽑아야 하는 2027학년도 정원(490명)과 지역으로 현행,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선발 비율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예외 없이 전원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채워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이번 수정안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지역 위대'인 광역권'으로 바꿨다.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뽑고, 그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해 지역에 장기 거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려는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학이 유리한 의과대학을 좇아 지방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 이주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며 "전남대의대를 가려낸 인근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중학교 소재지 요건 변경인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려면 중선 제정안과 달리 당장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시, 행정통합·통합공항 대응 인사 단행

인사위원회 3급 2명·4급 5명·5급 15명 등 총 99명

광주시 황인재 시민소통과장과 소진호 비서실장이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관련인사 17명

광주시는 지난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3급 2명, 4급 5명, 5급 15명 등 총 99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의결했다. 이번 승진 인사는 광주·전남 통합과 통합공항 건설 등 핵심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50주년 5·18민주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조직개편의 후속 조치이다. 3급 부이사관 승진자는 황인재 시민소통과장, 소진호 비서실장 등 2명이다. 황인재 시민소통과장은 총무·회계·대중교통과 등 요직을 거친 '행정 베테랑'으로 특광역시 최초 'AI 당지기' 도입이라는 파격적인 행정 혁신을 주도하며 공식 사회의 관행을 깨뜨린 바 있다. 특히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시민과 소통'의 최일선에서 갈등 조정과 여론 수렴에 앞장서며 현장 중심형 행정을 이끌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황인재



소진호

소진호 비서실장은 민선 8기 세 번째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시장의 시정 철학을 행정 현장에 안착시킨 핵심 가교다. 유연한 소통 능력과 명확한 판단력으로 난제들을 조율해 조직의 안정성을 이룩했다. 광역교통, 철도정책 등 전문 행정 역량에 정무적 감각까지 겸비해 '통합 1기' 시정 운영을 견인한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현안 부처에서 묵묵히 성과를 낸 김영규 기획재정담당관, 박용범 산업정책팀장, 장안숙 소비재보호팀장, 김경수 이천사업팀장, 유충서 도로계획팀장 등 5명이 4급 서기관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